

사회 구조, 통일, 사회 통합¹⁾

--‘탈북인’ 이해의 문제--

박 영신(연세대 사회학/명예교수)

1. 논의의 영역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난 지 벌써 60해가 넘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싸움질까지 해온 지도 60해가 되었지만, 두 쪽은 아직도 서로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있다. 두 쪽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모든 것 제치고 하루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 남북의 화해를 적극 시도해온 지난 두 정부의 정책 때문에 두 쪽이 하나가 되는 날이 생각보다 더욱 가까이 올 것이라는 풍김 새가 부채질 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날을 두고 여러 관심에 따라 여러 이야기를 활발하게 널리 벌려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통일이 될 날이 좀 더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거기에다, 오래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던 사람들이 그 동안 굳어져 온 삶의 타성을 벗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문제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널리 번지고 있다. 두 쪽이 정부 수준에서 ‘통일’을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기에, 통일 이후 두 쪽으로 갈라져 살던 구성원들 사이의 통합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통일이란 남과 북에 세워진 두 정부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이른바 ‘체제 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두 체제 안에서 살아온 구성원들이 새로 들어설 그 통합된 체제 아래에서 국가 구성원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두고 ‘외형의 통일’과 ‘내면의 통일’이라는 말로 구별해 보기도 하고(이 태욱, 1997: 55-57), “정치·경제·군사·법률·외교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통일”을 일컫는 “땅의 통일”과 “건강하게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사람의 통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전 우택/민 성길, 1996: 16-17). 지금까지의 통일 연구가 체제의 통합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평하고는, 사람의 통일을 위한 관심을 쏟는 연구를 이어오기도 있다(전 우택, 2007). 분단 이후의 이질화 과정 때문에 이질화된 사람들이 동질성을 되찾도록 하는 정신과 쪽의 접근이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다. 이질화라는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남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에 들게 된 것이다. 이것은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앞질러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김 명세(1996: 92-93)는 그 자신이 남한으로 온 북쪽 사람으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가는 문제는 민족의 하나 됨을 이뤄 나가는 거대한 민족사를 순조로이 엮어 나가는 예비적, 시험적 과정”이라며 “그 시험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민족의 불행을 미리 막아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고 어울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의 그 날이 가까이 오고 늦게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지나치지 못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수용 양태를 사회 구조의 맥락에서

1) 이 글은 앞서 발표한 것(박 영신: 2009)에 자료를 더하여 내용을 늘인 것이다.

풀이하고 통일 담론도 새겨보면서 위에서 말한 사회 통합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남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겪게 되는 적응 문제에 관해서는 값진 연구(전 우택, 2007)가 많이 있다. 여기서는 그 적응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그 변화의 맥락에서 탈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삶의 핵심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용사'의 퇴락

한국전쟁 이후 남한 사람들은 오래 동안 '귀순 용사'라는 말에 익숙했다. 이 말은 1962년에 만들어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지원법>에서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사람들을 '월남 귀순자'라고 이름붙인 데서 비롯되었다(이 우영, 2003: 19; 정 병호, 2004: 40-41). 1990년대까지는 귀순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귀순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 다채롭고 화려한 환영식을 열었다. 그들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정부에서 주는 큼직한 선물상자를 무릎에 놓고 반공의 구호까지 우렁차게 외치고, '귀순 용사'라고 쓴 간판을 건 차 위에 올라 거리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되었다. 원호금과 아파트 증서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월남 귀순자가 월남 귀순 용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함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선전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굳어진 냉전 체제의²⁾ 관행이었다.

이 오랜 관행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였다. 뜻밖에도 그때 나라 안팎의 형세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냉전 체제가 지구의 저쪽 동유럽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에서 인 탈소비에트 개혁 운동(Park, 1990; 박 영신, 1993, 2000)의 바람은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독일의 통일도 불러왔다. 그러나 지구의 저쪽에서 일어난 탈공산화의 바람이 지구의 이쪽에도 불어닥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에는 사뭇 미치지 못했다. 동유럽의 상황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도 그 나름의 까닭과 뜻에 따라 변화의 김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개혁을 시도해온 중국 공산당이라는 획일화된 통제 체제가 더욱 세차게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사회는 이름만 사회주의일 뿐 자유 경제 노선을 받아들여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는 체제로 탈바꿈해 갔다.

이 현상은 그러나 중국의 국경 그 안에서 멈추었다. 이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는 고사하고 체제의 개방을 불러오지도 못하였다. 대립과 대결의 긴장 상태가 한반도에서만은 누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가느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인민의 중국 나들이가 쉬어진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까지 들어오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남쪽으로 들어오는 북한인의 수도 조금씩 늘어갔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인의 숫자가 기껏 10명 안팎에 머물러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숫자가 늘어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해마다 1천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통일부가 밝히는 수치를 보면 그 수가 이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³⁾

이들 북한인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남쪽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다. 이들

2)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의 등장과 동북아 지정학의 맥락에서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Scalapino(1995: 183-215) 볼 것.

3)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인의 숫자와 연도별 통계에 대해서는 통일부 홈페이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에 대해서는 유 지웅(2005: 69-91) 볼 것.

에 관한 법도 새로 만들어졌다. 1993년에 만들어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이름만을 보아서도 별다른 변화의 낱새를 찾을 수 없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곧 ‘북한이탈주민’에서 ‘탈북자’라고 불리게 되었다(이 우영, 윗글).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터민’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모든 이름들은 정작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온 당사자들의 뜻과 바람과는 무관하게 남쪽 사람들의 눈에 잡히는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붙여진 것들이다. 실제로 이들 북한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마땅찮게 여기고 또 애매하게 느끼기도 한다. 남쪽으로 들어온 북한인들을 부르는 여러 이름 가운데 담담한 느낌을 주는 ‘탈북인’으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탈북인도 있다.⁴⁾ 이 글에서는 그러한 뜻을 존중하여 탈북자를 비롯한 여러 이름 대신에 되도록 ‘탈북인’으로 쓴다.

이 점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에 남쪽으로 와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 홍민이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법정호칭은 북한이탈주민이에요. 탈북자라는 것은 언론에서 만들어 낸 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2003: 33)라고 쓴 다음, 아예 어떤 딱지도 붙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유 북한인’이니 ‘자유인’이니 ‘탈북자’니 하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딱지를 달지 말았으면 했다.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듯이 ‘평양 사람’이니 ‘자강도 사람’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했다.⁵⁾ 그리고는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서 불리게 되는 그 이름의 변화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인들의 사회 이미지도 바뀌었다는 것을 실토했기도 했다. 그는 지난날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귀순 용사’들을 환영하는 대회도 열고 “돈도 엄청” 주었고, ‘귀순 용사’를 특별히 대우해주는 법에 따라 ‘정착금’을 주고 “집도 임대 주택이 아니고 분양 형식으로” 주었고, 한전이나 한국통신 같은데 직장도 마련해 주고, “대출도 통일부 보증으로 1억원씩 해” 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기 같은 사람이 오늘에 와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시인한다. 탈북자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해한다고 했다. 탈북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통일부도 이제 지쳤[다]”는 것이다. 한 해에 10명 정도가 남한으로 들어왔던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간파한다고 했다(윗글: 55-56).

귀순 용사의 시대에서 단순한 ‘탈북자’의 시대로 바뀌었고,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인들의 신분도 또 그렇게 바뀐 것이다. 한 마디로, 귀순 용사로 부르면서 환영식을 베풀었던 그 요란한 풍경은 퇴색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귀순’ 용사라는 존재가 희미해지고 그 귀순의 용사됨이 사그라지고만 것이다.⁶⁾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건, 특정 정권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서건 이제 남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을 만큼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탈북자 스스로 ‘통일부도 이제 지쳤다’고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남쪽으로 들어오는 북쪽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별 것 아닌 ‘단순한 탈북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을 일컫는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탈북자’와 ‘탈북 이주민’으로부터 ‘새터민’이라는 말에 이르는 여러 이름이 있다. 어찌되었건 남한 사람

4) 이것은 김 명세가 “통일후의 사회(재)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2007년 9월 22일/신반포중앙교회) 내놓은 말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뜻을 존중하고 같이하여 탈북자를 비롯한 여러 이름 대신에 되도록 ‘탈북인’으로 쓴다.

5) 통일이 될 경우 우리 사회의 지역성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는 김 병로(2000: 39-61)도 볼 것.

6) 이러한 현상을 냉전 체제와 그 와해와 이어 논하고 있는 정 병호(2004) 볼 것.

들은 이들 탈북자들을 지난날의 귀순용사처럼 대하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온 북한 이탈주민쯤으로 생각한다(유 지용, 2005: 66-70). 이들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단순히 경제의 어려움을 피해 경제의 풍요를 누린다는 남한으로 왔을 뿐이라고 느낀다. 실제로 탈북인 스스로 탈북한 동기가 ‘체제 불만 등의 정치적 요인’(13.4%)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57%)이라고 대답하고 있다(정 연중, 2002: 45). 탈북 동기는 2000년대에 들어 ‘생활고’ 때문이라는 수치가 점점 더 늘어 2004년에는 69%에 이르렀다(유 지용, 2005: 92-93).⁷⁾ 생활고 때문에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인을 대하는 남한인들의 태도 또한 그렇게 ‘우호적이며 동정적’(25.2%)이기보다는 ‘그저 그렇다’(49.6%)며 무덤덤하게 느끼고 있어, “무관심, 냉정함, 경멸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정 연중: 49, 70).

3. 탈북인의 ‘남한인 되기’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이상 탈북인들은 남한의 경제 체제에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물론 남한이 직접, 간접으로 부추기고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른바 사회 적응 교육이라는 것이 이 일을 맡고 있다. 1997년에 만들어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자 하여 1999년에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 문을 열게 되었다.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인의 수가 늘어나 시설이 부족한 나머지 교육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지만, 지난 해 말 하나원이 증축되어 교육 기간도 정상화되고 연간 수용 능력도 4,2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⁸⁾

탈북인들은 먼저 탈북 동기와 입국 경위에 대하여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합동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의 교육과정에는 탈북인들이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겪어야 했던 슬한 어려움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와 새로운 체제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 불안을 보듬어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거기에는 자존감을 높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집단 상담과 같은 소집단 교육, 스트레스 해소와 관리,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장 선하, 2008: 25-30). 법에 따라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가면 탈북인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권리를 누리고 국민이 된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얻고 배운다.

그러므로 이 교육 과정에서 탈북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강한 북한 말씨와 사투리를 조절하는 연습도 시키고 남한의 표준어를 배우게도 한다. 아무리 북한의 경제가 비공식 경제 영역인 시장의 상거래를 방관해야 할 만큼 자체의 통제력을 잃었고 북한 인민의 삶에 시장 기체가 벌써부터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⁹⁾ 그리고 탈북인들이 남한에 들어오기에 앞서 제 3국에 머문 경우 시

7) 이러한 점에 더하여 다른 요인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최 대석/조 영주(2008) 볼 것.

8) 통일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2009.4.25)에서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표준과정」 확대·개편(09-0309 하나원 교육과정 확대개편)을 알리고 있다.

9) 이것은 앞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체제에서 나타난 현상(박 영신, 1993: 242 아래)과 이어지는 논지로서, 장 경섭(1994: 133-156)은 북한 사회에서도 공식 영역의 바깥에 자리한 비공식 영역을 ‘이차 의식,’ ‘이차 경제,’ 또는 ‘이차 사회’라고 하여 시민 사회의 잠재력으로까지 끌고 간 바 있다. 그리고 이 영선

장의 기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의 경제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초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합리스런’ 소비 교육도 시켜 가면서 남한의 시장 경제를 체득케 한다(장 선하, 윗글: 47-53).

이렇게 탈북인들은 모두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하루 속히 북한에서 체득한 의식을 떨쳐버리고 남한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야만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성공’의 사닥다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자본주의자로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다. 그러한 자본주의화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이들 탈북인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선다. 이들은 곧바로 정착지원을 받고 지역 단위에서 정착해야 한다. 탈북인 수가 늘어난 오늘에 와서 이들이 받는 혜택이란 당연히 지난날 귀순자들이 받았던 융숭한 보상에 견줄 수 없다. 1인이 받는 지원금은 초기 지급금과 분할 지급금과 주거지원금을 합하여 1,900만원이다. 이들은 정착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민으로 정착하여 남한인 되기의 과정을 강화하며 살아간다(장 선하, 윗글: 20, 71-77).

심층 면접을 하는 가운데 만난 탈북인들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남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는, 그렇게 때문에 ‘자본주의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남한 사회에 맞춰가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에는 편차가 있다. 북한을 벗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 머물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곧 그것을 받아들여 “적응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온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탈북자 면접 녹취록, 2/2008년 1월 27일자). 하지만 최근 북한도 “중국 상품이 들어옴으로 [...]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본주의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북한 사람들도 “좀 더 자본주의 쪽으로” 접근해 가는 것 같다고 하니(탈북자 면접 녹취록, 7/2008년 2월 27일자), 시장의 논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¹⁰⁾

남한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대로 탈북인들은 남한식으로 살아간다. 탈북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항목에 75.7%의 높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돈만 있으면 북한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항목에 68.7%라는 높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새터민(탈북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2008; 정재영, 2008: 39). 탈북인들은 ‘경제주의’의 의식 세계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 세계를 전수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구에 고착되어 있다는 인상도 준다. 이러한 의식 세계는 물론 ‘누구보다 우리 가족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관심(가족주의)이 90.8%의 아주 높은 수치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난 바이다(윗글, 39-40).

통일에 대하여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는 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제의 힘에 무게를 두고 경제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이한다. ‘경제주의’의 틀에 모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얼핏 통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주장이 경제의 논리를 벗어던진 듯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통일을 통하여 경제의 힘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주변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

(1998: 116-118) 볼 것.

10) 이와 이어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치 수준에서 논하고 있는 박 종소(2008: 16-27)와 심층 면접 자료로 북한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조 성돈(2008: 52-53)을 볼 것.

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여러 갈래의 사람들 모두 지난 1998년 정 주영이라는 재벌 총수가 소떼를 몰고 분단의 경계를 넘어섰던 일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 또 한 단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그의 경제 협력 노선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박 영신, 2000년: 13-38). 통일이 어떤 과제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쪽이든 아니면 통일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쪽이든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북쪽의 자원, 그리고 노동력과 잘 엮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경제 부국의 믿음에서만은 모두가 하나였다.

경제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남쪽 사람들에게 북한은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편리한 도구이고 값싼 수단이다. 남한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로 탈북인들을 바라본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져 생존마저 어렵게 된 나머지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경제 이유로 탈북한 일종의 경제 이주민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틀리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북쪽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져 남쪽으로 오는 탈북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날 잘 먹고 잘 살길을 찾아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 사회의 규칙에 따라 묵묵히 일하면서 하루 속히 남한인처럼 올라서고자 한다.

그렇게 성공을 거두며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가 모범이다. 말씨도 바꾸고 사고방식도 바뀌게 되었다. 10년 전에 남한에 들어와서 몇 해 전부터 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보기이다(탈북자 면접 녹취록, 2/2008년 1월 17일자). 그는 “퍼져나가고 싶어도 못하고, 발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잘 살게 생겼고, 또 내가 한 것만큼 손에 들어”온다고 했다. “북한은 많이 해도 들어오는 것이 없고, 잘 해도 똑같고 그래서 발전이 없[고] 그것이 제일 답답했는데 남한에서는 자유롭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되어있다면서, “그것이 제일 좋잖아요!” 하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렇게 탈북인의 남한인 되기는 부드럽게 진행된다.

탈북인은 남한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받아들여 그것을 삶의 뜻대로 삼아 충실하게 적응해 간다. 여기에 잘 적응해 가는 것을 남한 사회는 바람직한 정착이라고 여긴다. 남한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삶의 틀에 스스로 맞춰 가게 되는 것이다.

4. 통일의 담론

이처럼 모든 것을 경제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 가운데 경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장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 의식의 동질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탈북인들을 남한 체제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그만큼 성공을 견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부드럽게 남한 사회의 가치 지향성에 따라 체제에 적응하는 일이다. 적응이란 곧 남한의 가치 기준에 맞추는 동질화를 가리키며 그것은 곧 남한 식의 삶으로 획일화시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언어와 역사 전통을 공유하는 한 핏줄의 민족이라는 자원을 동원하여 그 틀로 모든 동화 정책과 적응의 논리를 강화하고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통일 방안을 들어왔다. 그 어떤 것이든 그 속에는 ‘민족’이라는 오지부동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 승만 정권으로부터 노 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통일 방안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북진 통일이나 승공 통일 방안이 퇴색하고 평화와 공존을 내세우게도 되었다. 그러나 그 방안과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단결과 민족 통합이라는 구호는 빠진 적이 없었다. 1972년 남과 북이 3대 원칙에 합의한 것 가운데 “이데올로기, 신앙과 제도적 차별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모색하여야 한다”고¹¹⁾ 한 것은 가장 뚜렷한 보기이다. 이후에도 민족이라는 이념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노 태우 정권

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이라고 하여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민족의 희생”을 강요 없이 민주스런 과정을 통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통일부, 1999: 68-69). 국민의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내세워 평화 공존의 관계를 다지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하였다(통일부, 2002: 1장 “대북 포용정책 추진”). 남과 북의 두 정상은 2000년 6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가자고 공동으로 선언하였다(통일부, 2000: 132). 참여정부 역시 남북의 평화 번영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며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민족의 공동번영”(통일부, 2008: 21-57)으로 나아가 “민족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북쪽에서도 이에 화답하였다. ‘남북 공동보도문’에서 “민족 공동의 의사와 이익”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이다.¹²⁾

한 핏줄을 타고난 민족이라는 이념은 모든 정권의 통일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정당성의 근거였고 그 정책 노선을 합리화할 수 있는 표준 잣대로 기능해 왔다. 그것은 정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수준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한 핏줄을 타고난 한민족 공동체라는 이념은 마음과 느낌을 효과 있게 끌어낼 수 있는 강렬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이 ‘민족’ 분단이었고 겨레끼리 서로 총을 쏘며 다투고 싸웠던 한국전쟁이 ‘민족’ 상잔이었기에 그 전쟁이 빚어낸 피난민은 남쪽 사람이 보살펴야 할 한 핏줄의 동족이었고 동포였다. 마찬가지로 탈북인은 남한 사람들이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야 할 한 핏줄의 동포인 것이다. 탈북자의 처우를 비롯한 여러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오직 동포라는 민족의 감정에서 비롯되어왔다. 보기를 들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인을 남한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많게 나오는 조사 결과도(정 연중, 2002: 51)¹³⁾ 한 핏줄을 타고난 겨레 의식이 여전히 ‘특권의 자리’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버릇처럼 한 핏줄이라며 민족을 들먹이고 겨레라는 낱말을 되뇌는 것은 조국 통일의 뜻을 지켜가도록 부추기고 통일 의지를 꺾지 않고 간직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 핏줄의 의식 세계는 남한 쪽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민족과 겨레의 틀 속으로 들어가 남한의 삶을 닮아 가도록 하는 ‘동화 강요’의 촉진제 구실을 한다. 민족의 동질성은 북한에서 말하는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우리끼리’의 의식 세계와는 다른 남한 식의 삶을 전제로 한다. 민족이란 남한 체제 중심의 일방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의식의 바탕으로서, 탈북인들이 남한의 체제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동화의 과정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핏줄의 의식 세계로 들어서기는 통일된 부강한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는 결의이며, 그러한 꿈을 가지고 모두 뭉쳐야 한다는 의식의 다짐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이념은 이러한 삶의 지향성에서 벗어난 다른 삶의 가능성은 생각의 지평에 들어서지 못하게 숫제 막아버리는 도구이기도 하다. ‘민족’이라는 말은 새로운 일방주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동원되는 편리한 개념 장치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일제 강탈기의 겨레 사랑을 담아온 민족 일체감을

11) 남북 공동성명의 전문이 실려 있는 통일부(2000)의 부록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볼 것. 그리고 이전의 정부가 표방한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김 승남, 1994: 77-78 볼 것.

12)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그 변화에 대해서는 Bae/Rozman(2008: 131-151) 볼 것.

13) 이것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탈북자의 전면 수용에 대한 찬성은 41%이 반대는 33.3%로 나와 있다. 이것은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0%, 반대가 38.5%로 나온 바 있다(정 연중, 윗글: 같은 곳).

표상하고 광복 이후의 첨예한 분단 상황을 넘어서겠다는 어떤 가능한 의지에 발판을 제공해 온 담론의 핵이다. 그것이 겨레의 결속 의식을 지켜오고 그 의식으로 민족의 동질감을 자아내는 데 기여해 온 바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의식으로 잃어버린 나라의 딸들을 지켜왔고 반일 애국의 자주 의식을 부추겨 왔으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움까지 벌인 겨레 상간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일 의지를 지켜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의식 세계는 민족 담론으로 엮어져 왔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겨레 역사에 준 기여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한 탈북인의 말처럼 바로 ‘한민족’이라는 의식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탈북자 면접 녹취록, 3/2008년 2월 3일자) 통일의지도 지켜져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의 의식을 부추기는 ‘하나 되기’의 민족 담론이 통일 논의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력을 발동하며 통합과 동화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 ‘하나 되기’의 의식 세계는 탈북인들이 남한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동질화의 강요로 나타난다. 거기서 소외되어 무시당하는 소수 집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남한인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남한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의 대상이 된다(강 주원, 2002, 2003). 그럼에도 남북은 한 핏줄을 타고 났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물샐 틈 없는 동화 정책을 통한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남한 정부의 정책이다.

5. 사회 변동과 새로운 담론

하지만 그 한 핏줄에 호소하는 민족 담론의 시대는 이제 마감해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남한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혼인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혼혈아들도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남한에 등록된 외국인은 수는 1995년 5만 5천 명에서 2000년에는 15만 명으로 급증하고, 2004년에는 다시 3배로 뛰어 50만에 육박하였다(양 기호, 2007). 국제결혼 이주자의 수도 늘어나 2005년에는 4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도 39,960건으로 11.9%를 기록하였다(남 인숙, 148-149). "이미 농촌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이 거의 4할에 달하고"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비율이 9할에 가까운 88.9%"나 되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수도 2005년 들어 30,727명에 이르고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가 1,574명에 이르고도 있다(양 기호, 2007).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국제 결혼한 외국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남한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여기 다 적을 수 없다. 단일한 민족 문화라는 좁고 엄격한 틀 안에 모두를 동화시키고자 하여 좀처럼 조그마한 차이와 이탈의 여지도 주지 않는 남한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공식 수준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는다 하면 비공식 수준에서도 배제와 단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주의를¹⁴⁾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다문화를 표상하는 이들 외국인에 대하여 여전히 동화주의를 강요한다(장 미혜 외, 2008: 39). 국가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면서 ‘탈영토화된 경험’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범세계화의 상황에서(최 중렬, 2008) 문화의 동질성을 자국의 정체성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다. 1989년과 1996년에 프랑스에서 이슬람의 문화 관습에 따라 여학생이 스카프를 두르는 것을 학교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나라가

14) 지난 70년대부터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역사와 인종과 문화를 달리하는 나라 사이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구 견서(2003: 29-52).

들끓었던 이른바 ‘스카프 사건’은, 문화의 동질성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⁵⁾ 문화라는 것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유동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한 영토의 문화 전통을 기억해 가는 한 핏줄의 전유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의 문화 전통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국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 당당하게 국가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동시에 국가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중’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국가는 ‘타자의 타자됨’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Benhabib, 2008: 51-69).

앞에서 살펴본 탈북인들의 삶과 자리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외국 노동자와 결혼 이민 여성과 혼혈 어린이들이 겪어야 하는 냉대와 차별의 문제를 제쳐둔 채, 한 핏줄을 타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의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족의 담론은 낮은 자들에 대한 윤리 감수성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를 거둬들여 오면서 핏줄을 같이 하는 동포혈통주의에 익숙해 있고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민족’만을 혈통을 같이 하는 동포로 규정하여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지켜세운다면, 그것이 주류 집단의 일체감과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으로 범세계화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의 삶에 적절한 의미와 통합의 틀을 마련해 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를 떠받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의 민족 담론을 변화된 사회를 떠받들어줄 바탕의 가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변화된 사회는 변화된 의식의 틀을 요청한다. 삶의 조건 상황이 범세계 수준으로 확장되면 그 이전의 조건 상황에서 정당화되었던 도덕성으로는 사회의 통합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Park, 1996).

통일이 된 나라가 한민족만의 공간이 되기에는 범세계화의 파고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드세다. 통일 이후에도 결혼 이민 여성이 있고 혼혈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외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영구히 소수자로 차별하고 탄압하여 주변인으로 밀어낸 다음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사회 재구성의 과정이 통일의 한쪽이 되어야 한다. ‘민족’이라는 한 핏줄의 의식을 들먹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은 이들 소수자들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하다. 소수자도 ‘환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코스모폴리탄 시민권’에 속하는 권리이다(Benhabib, 2008). 바로 이러한 윤리 지향성에서 남한 사회의 모든 소수자가 존중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이 소수자는 남한 사회의 굳은 동화주의에 짓눌려 오직 자본주의의 관행과 습속에 동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저 변두리의 소수자 탈북자들이(유 지웅, 2005: 60-77)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듯이, 핏줄을 달리하는 다른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소수자로 몰리고 있는 탈북인들은 ‘환대의 권리’ 주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민족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동시에 동화주의에 억눌리는 상황에 순응하는 대신 자기 소리를 내는 시민의 자리로 들어서야 한다. 북한 체제의 일방주의가 낳은 모순을 혐오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인들이 남한 중심의 일방주의에 밀려 들어서게 된 이 역설의 상황에서, 탈북인들은 당당한 시민으로 침묵과 순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단일 민족이라는 전통과 용해·유착되어 더욱 억센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동질성을 지켜세우는 일방주의는 오늘 이 시대의 관

15)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견주고 있는 임 운택, 2008: 95-145 볼 것.

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뿐더러 통일된 나라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국가의 구성원이라면 혈통과는 상관없는 시민이 되어 시민이 된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가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 공동체는 민족의 담론 그 너머 시민의 담론으로 엮어져 있어야 한다. 풍요를 자랑하면서도 이웃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굳은 시장 체제 안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가두어 두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문을 닫아두려는 것이다. 틀에 박힌 사회주의가 오래 전에 사망하고 기고만장한 자본주의가 최근에 파산한 마당에(Hobsbawm, 2009) 지나간 특정 체제를 강요하는 일방주의는 어리석은 것이다. 통일은 어느 한쪽의 독선이나 강요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길동무 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빚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길부터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통일된 나라도 당연한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도 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다수자는 소수자가 조용하게 기존의 관행을 따라 오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다수자의 이익에 들어맞을 때에만 소수자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 땅의 다수자는 이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주변인들의 아픔에 대하여 불편해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한 핏줄의 우리 동포가 당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불편해하면서 그들을 한민족 공동체로 묶어 세력을 떨쳐볼 궁리를 하고, 문화다원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어둘 방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윤 인진, 2008: 207-227). 다른 나라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한민족에 쏟는 관심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 마땅히 쏟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범세계화의 상황에 던져진 오늘날, 한 핏줄을 타고났다는 혈통의 운명에 기대는 민족의 정체성으로 사회 통합을 획책하려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범세계화의 상황에 통합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혈통과는 상관없는 탈민족의 정체성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 이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땅의 문제에 발언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러한 시민의 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 정권의 계산에 따라 탈북인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니들 좀 조용히 해 주라’”(김 홍남, 2003: 55) 하는 식으로 탈북인을 정치 도구화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 담론에서 용납될 수 없다. 벌써부터 세계 공동체가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국제법으로 성문화하고 있는 그 범세계화의 관심 밑바탕에는, 인간인 한 누구든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범세계 공동체의 규범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대를 맞고 있다.

6. 맺음말 같음: 교회의 일

이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 던져진 피할 수 없는 물음이다.

개신교회는 일찍이 19세기 말에 이 땅에 들어와 격동하는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박 영신, 2006: 55-79; 박 정신, 1997, 2004, 2008; Park, 2003). 일제 강탈기에는 한민족의 광복 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군사 독재 정권 밑에서는 민주화의 한 몫을 맡기도 하였다. 분단의 역사에서도 교회는 그 나름의 관심에 따라 끈질기게

통일 운동을 펼쳐왔다(이 범성, 2008: 4-7). ‘우리 민족’을 앞세워 북녘 동포를 돕고자 하고 북한에 선교 진지를 만들려는 갖가지 일을 벌였는가 하면 민족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대화를 열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그것대로 값을 지니고 있고 그 나름으로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교회는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춘 통일과 그 이후의 일을 함께 생각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틀을 내놓아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우선 같은 핏줄을 타고난 동포이기 때문에 특권을 주고자 하는, 그것도 자기 집안 중심으로 살아가는 습속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오래된 민족의 담론을 넘어서서, ‘이웃 일반’에 대한 관심의 틀을 제공해 주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민족을 일깨워 참여 의식을 북돋고 외세에 맞선 그 특유의 민족주의를 표방한 값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나 민족의 절대화를 겨냥하는 것일 수 없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의 권위 밑에 위치시키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긴장을 전제하는 것이었다(박 영신, 1978; 박 정신, 2004: 73-94; 126-179). 이러한 역사 전통에 따라 교회는 초월의 빛으로 좁다란 핏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의식 세계와 행동 지향성을 새겨보아야 하고,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는 주변의 소수자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지평 위에서 탈북인들을 만나야 한다. 그들은 남한 사회가 굳혀 놓은 삶의 틀에 동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삶의 틀을 초월의 권위에 기대어 함께 생각하고 질문해 가면서 돌파해 가는 순례의 벗이다. 그러므로 탈북인들은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칸막이를 친 다음 별도의 프로그램에 예속시켜 동화시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교인’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그들은 단순한 물질의 도움이나 자선 행위를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공동 책임의 삶을 교회에서 익힐 수 있어야 한다. 탈북인들이 공공의 삶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체험하여 그러한 삶의 방식을 교회 바깥에서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교회 스스로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시민됨’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공공의 영역을 넓힌 바 있으나, 오늘에 와서는 사라져 버린 교회의 공공성을(박 영신, 2004; C. Park, 2007; Y. Park, 2007), 교회 스스로 다시 찾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교회는 탈북인들 스스로 좁다란 관심의 공간을 넘어서서 시민 단체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된 자질을 키워주고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¹⁶⁾

우리 사회가 물질의 획득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경제주의) 가치 지향성에 매몰되고 자기 가족에 대한 좁은 관심의 세계(가족주의)에 갇혀 있는 이 삶의 행태에 대하여, 교회는 초월의 권위에 기대어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있는(Park, 2000: 518-521) 공공의 공간으로서 있어야 한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습속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떠받들고 있는 가치와 행동 지향성을 초월의 가치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에는 어떤 일방주의도 어떤 획일주의도 용인될 수 없다. 모두가 겸허히 스스로 비춰볼 따름이다. 관심의 초점이 통일과 탈북인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수단 문제에 모아지고 있을 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의 문제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있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은 새로운 삶의 세계를 위하여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공공의 소통에서 그 통합의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 없이 통일을 획책한다면 그것은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진정한 뜻에서의 ‘사회 통합이 없는’ 체제의 통합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16) 이 점은 「새터민(탈북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정 제영(2008: 37)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도움 받은 글

<우리 나라 글>

- 구 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인식」, 27권 3호 (2003).
- 강 주원, “탈북자 소수 집단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구별짓기” (한양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강 주원, “‘우리는 하나다’라는 화두,” 「아웃사이더」, 15호 (2003).
- 김 명세,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 과정,” 이 영선/전 우택 (엮음),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 1996).
- 김 병로, “탈분단의 사회 갈등과 공동체 형성의 모색,” 「현상과인식」, 24권 3호 (2000).
- 김 승남, “중국 학자가 본 한반도 통일 방향,” 이 영선 (엮음), 「북한의 개혁 전망과 통일 과제」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4).
- 김 흥민, “‘난 용사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용사인 척하지!’,” 「아웃사이더」, 15 (2003).
- 남 인숙,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 이해” (한국사회이론학회/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학술모임 <다문화 시대의 사회 윤리>/2008년 12월 20일/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박 영신, “독립협회 지도 세력의 상징적 의식 구조,” 「東方學志」, 20집 (1978).
- 박 영신, 「동유럽의 개혁 운동: 폴란드와 헝가리의 비교」 (서울: 집문당, 1993).
- 박 영신,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 바츨라브 하벨의 역사 참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박 영신,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두 체제를 몰아가는 ‘통일’의 장단,” 「현상과인식」, 24권 3호 (2000).
- 박 영신, “‘공공의 공간’의 형성과 확장: 한말 조선 사회와 그 이후,” 「사회 이론」, 25호 (2004).
- 박 영신, “기독교와 사회 변동,” 박 영신/정 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박 영신, “사회 구조와 통일 담론,”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 독일탐방 발제 자료,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009).
- 박 정신, 「근대 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 박 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 (서울: 혜안, 2004).
- 박 정신, 「한국 기독교사의 새로운 이해」 (서울: 도서출판 새길, 2008).
- 박 종소, “9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 중간발표 학술회의,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2008년 6월 12일).
- 양 기 호,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지방정부” (한국사회운동학회 학술모임 <지속 가능 발전과 한국 사회운동의 전망: 다문화, 생태환경, 경제양극화>/2007년 12월 20일/녹색연합 교육센터).
- 유 지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연구 :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05).
- 윤 인진, “한민족 이산(Diaspora)과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東方學志」, 142집 (2008).
- 이 범성, “한국교회 민족통일운동의 선교 과제, 사회 통합,”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 중간발표 학술회의,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2008년 6월 12일).
- 이 영선,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남북한 주민의 경제의식 동질화 과제,” 「북한연구」, 2권 1호 (1998).

- 이 우영, “탈북자의 역사적 맥락,” 「아웃사이더」, 15호 (2003).
- 이 태욱, “체제 통합에서의 경제 부분의 역할,” 이 영선(엮음), 「통일 준비」 (서울: 오름, 1997).
- 임 운택, “이주 노동자 사회통합정책의 국제비교연구” (한국사회이론학회/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학술모임 <다문화 시대의 사회 윤리>/2008년 12월 20일/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장 미혜 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장 선하, “한국 사회의 탈북 이주민 국민 만들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전 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전 우택/민 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 영선/전 우택 (엮음),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 1996).
- 정 병호,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 사회의 인식 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집 1호 (2004).
- 정 연중,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정 재영, “새터민(탈북자)의 사회의식 조사,”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 중간발표 학술회의,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2008년 6월 12일).
- 조 성돈, “새터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통일과 그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 중간발표 학술회의,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2008년 6월 12일).
- 최 대석/조 영주,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집 2호 (2008).
- 최 종렬, “인정의 정치학과 무관심의 정치학: 다문화 일상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이론학회/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학술모임 <다문화 시대의 사회 윤리>/2008년 12월 20일/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자료>

- 「새터민(탈북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연구팀/글리벌리서치, 2008년 5월 28일).
- 「탈북자 면접 녹취록」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연구팀, 2008).
-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1999).
- 통일부, 「통일백서」 (2002).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다른 나라 글>

- Bae, Jong-Yun/Gilbert Rozman, “South Korean Strategies Thought on Reunification,” Gilbert Rozman/In-Taek Hyun/Shin-wha Lee (엮음), *Korean Strategies Thought toward Asia* (New York: Palgrave, 2008).
- Beahabib, Seyla, *Another Cosmopolitanism* (with J. Waldron/B. Honig/W. Kymlicka) (Robert Post 엮음)(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hoi, Jaehoon, “Social Movements for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A Perspective on the State for Transformational Social Movements”(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2008).

Hobsbawm, Eric, "Socialism has failed. Now capitalism is bankrupt. So what comes next?," *The Guardian*, 2009년 4월 10일자.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Park, Chung-shin, "The Protestant Church as a Political Training Ground in Modern Korea"(The Symposium on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Korean Culture"/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2004년 5월 7일), 또는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1권 (2007).

Park, Yong-Shin,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hange in Eastern Europe," *Socialist Experiment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Conference, Ulsan University: Seoul, 1990).

Park, Yong-Shin, "A New Morality for the Global Community," Young Seek Choue/Jae Shik Sohn(역음),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Seoul: UNESCO HQs/Kyung Hee University, 1996).

Park, Yong-Shin, "Protestant Christianity and Social Change in Korea," *Social Compass*, 2000.

Park, Yong-Shin, "The Church as a Public Space: Resources, Practices, and Communicative Culture in Korea"(The Symposium on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Korean Culture"/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2004년 5월 7일), 또는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1권(2007).

Scalapino, Robert, "Korea in the Cold War and Its Aftermath," Robert Ross,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New York: M. E. Sharp, 1995).